

# 자산이전 컨설팅과 보험설계 컨셉⑫

# 1) 자산가 상속과 보험 설계

## 상속 발생시 홍씨네의 예상 문제점은 무엇일까?

엄청난 재테크 고수 홍씨!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강남에 100억대 빌딩을 건축하였습니다. 다만  
건축비용이 만만치 않아 아직도 부채가 20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였습니다.

홍씨네 유가족에게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홍씨가 간과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홍씨의 예상 상속세〉

상속재산	120억원
(-)부채	20억원
(-)장례비	10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99억 9000만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30억원
(=)과세표준	64억9000만원 (50%-4억 6000만원)
(=)산출세액	27억 8500만원

## 홍씨네 상속 발생시 예상 문제점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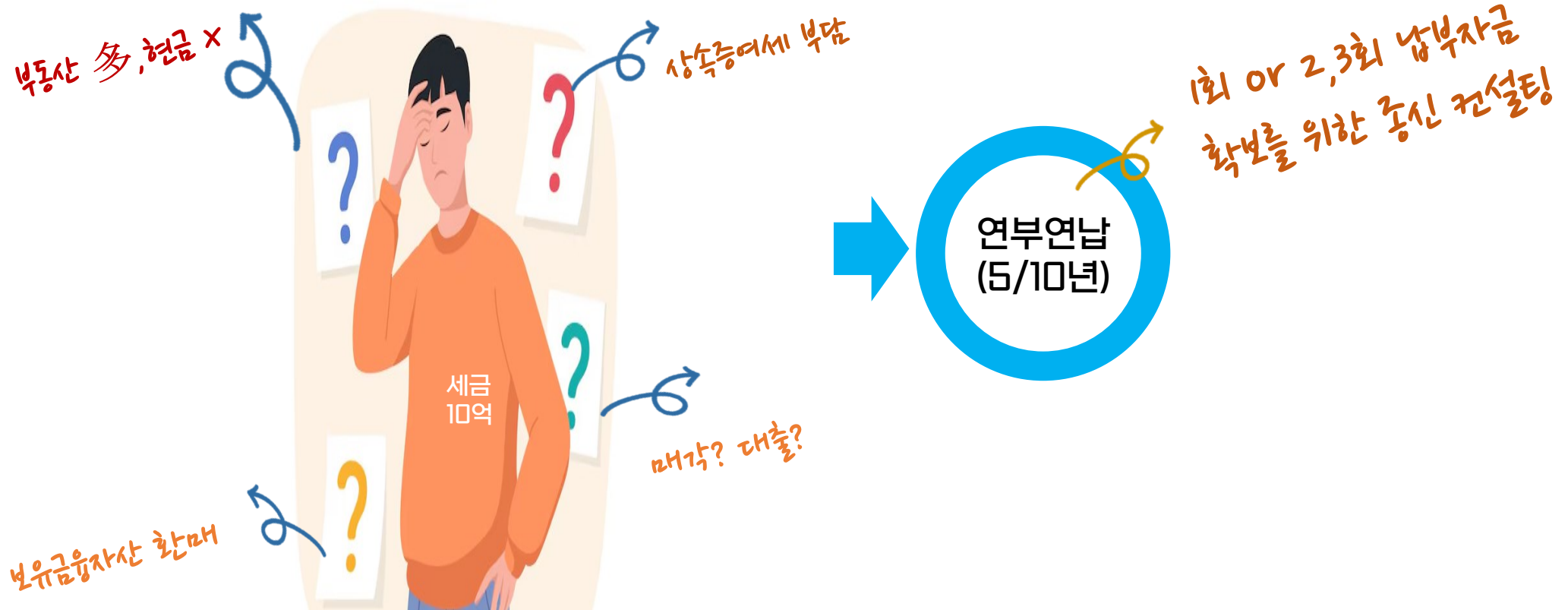
3

4

# 상속세 납부 자원 분석

방법	내용 및 효과
현금 (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 중 80 % 이상이 부동산 등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고액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은 매우 낮음</li> <li>• 금융 재산인 경우에도 주식, 펀드 등 투자형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어 매매타이밍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상존하고,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속인 자산 손실 가능</li> <li>• 금융자산을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하여 상속세 납부 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상속세 예상금액이 적립될 때까지 계속 납부해야 함. 하지만 상속발생시기는 아무도 모름.</li> </ul>
부동산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을 받아서 상속세를 납부 할 경우 대출이자 부담 발생하고 담보 설정을 위한 감정 평가 시 시세가 노출되어 추가 상속세 부담 발생 가능성 高. 상속인을 채무자로 만들게 됨</li> </ul>
부동산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려 할 경우, 적기에 매각이 불가능 할 수 있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li> <li>• 또한 부동산 매각 시 시가가 노출되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li> </ul>
물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세 물납 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정되어 자산 손실을 가져옴. 결국 물납은 피상속인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과 같은 결과</li> </ul>
종신(사망)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보험자 사망 때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약정한 보험금 지급</li> <li>• 평소 약정된 보험료 지출로 고액의 상속세 납부 자원을 마련 가능 (비용대비 효과 극대화)</li> <li>•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대출 받을 필요가 없어 피상속인의 자산 유지</li> </ul>

## 2) 상속세 부담과 연부연납 그리고 보험 설계



# 3) 배우자 공제와 보험설계

## ◆ 배우자 공제 금액에 따른 상속세의 차이

(자녀 1명

자산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공제최소 과세표준	상속세	공제최대 과세표준	상속세	차
		최소	최대					
15억	5억	5억	9억	5억	0.9억	1억	0.1억	0.8억
20억			12억	10억	2.4억	3억	0.5억	1.9억
30억			18억	20억	6.4억	7억	1.5억	4.9억
40억			24억	30억	10.4억	11억	2.8억	7.6억
50억			30억	40억	15.4억	15억	4.4억	11억
70억			30억	60억	25.4억	35억	12.9억	12.5억

➡ 배우자 공제 적용 금액에 따라 상속세 차이 (배우자 법정지분, 실제 상속분)  
 배우자 공제↑ → 세금↓ → 배우자 2차 상속 고려

## ◆ 배우자 유무 금액에 따른 상속세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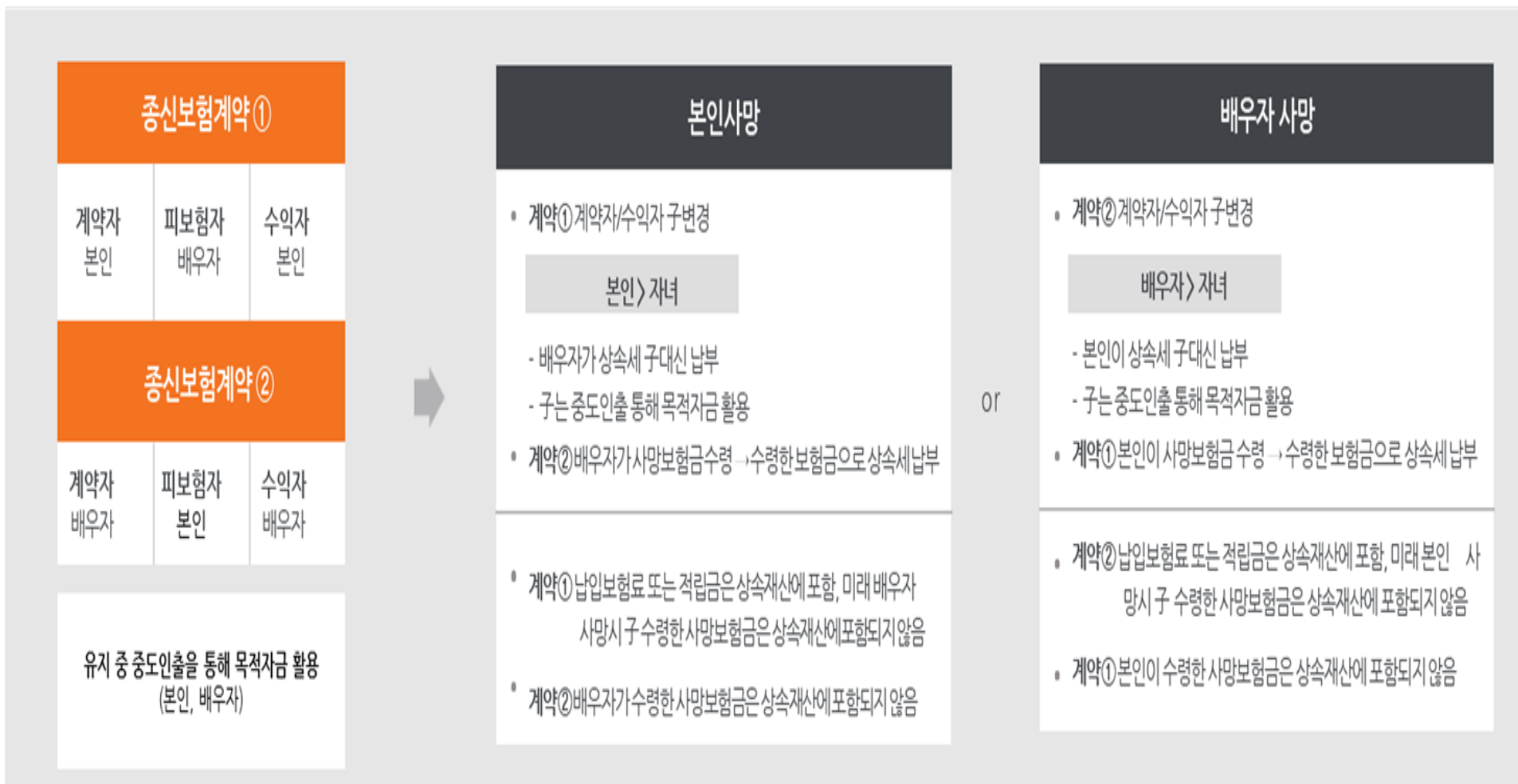
(자녀 1명)

자산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최대	배우자 有 상속세	배우자 無 상속세	차
15억	5억	9억	0.1억	2.4억원	+2.3억원
20억		12억	0.5억	4.4억원	3.9억원
30억		18억	1.5억	8.4억원	6.9억원
40억		24억	2.8억	12.9억원	10.1억원
50억		30억	4.4억	17.9억원	13.5억원
70억		30억	12.9억	27.9억원	15억원
100억		30억	27.9억	42.9억원	15억원



**2차 상속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대한 준비 필요**

## ◆ 2차 상속에 대비한 종신 보험 설계



**상속세 준비가 필요한 사람? 누구일까?**

## 4> 혼인 출산 공제와 보험 설계

### 혼인 출산 증여 공제

기간 : 혼인 신고 전후 2년 내 or 자녀 출산 후 2년 내  
증여 공제 : < 1억 > 한도 공제

→ 혼인 출산 공제와 성인 자녀 공제 5천만원 포함시  
→ 최고 < 1억5천만원 > 공제 가능



자녀 결혼 및 손자녀를 위한  
장기 목돈 마련 비과세 플랜





## 1억 5천 만들기 플랜

월 152만원 7년납 3년 거치

운용형식	월적립액	적립기간	이자율(단리)	과세방식	세전 이자	세후지급액	비고
정기적금	1,520,000 원	84 개월	3.0 %	일반과세	13,566,000 원	139,156,836 원	적금
운용형식	예금원금	예치기간	이자율(단리)	과세방식	세전 이자	세후지급액	비고
정기예금	139,156,836 원	36 개월	3.0 %	일반과세	12,524,115 원	149,752,237 원	예금

종신보험 월 152만원 7년납 (40세 남)

구분	경과기간 7년	경과기간 10년	비고
해약환급금	127,680,000원	156,317,357원	예적금대비 (+6,619,000원)
사망보험금	최저1억원 + 2년경과 후 20% 씩 체증(5년간)		

##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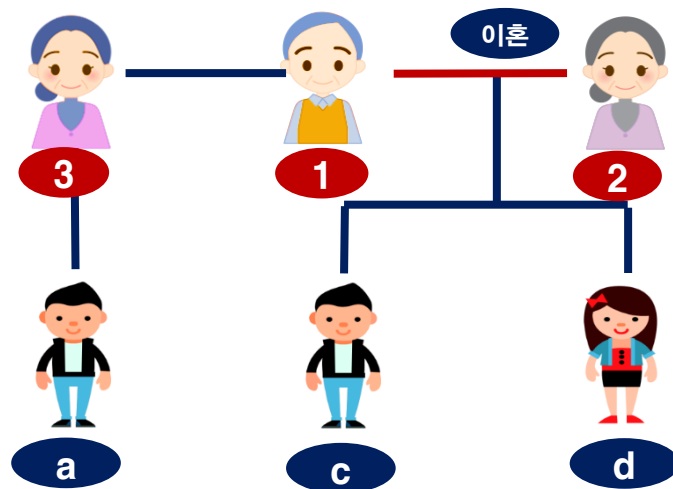
## 5> 이혼 재혼 그리고 상속과 보험설계

### 이슈② 이혼 재혼 그리고 상속과 보험

Q.1 22년 혼인 건수? 19만건 이혼 건수는 ? (      )

Q.2 혼인건수 19만 건 중 둘 중 한명은 재혼인 건수? (      )

Q.3 이혼 건수 중 미성년 자녀 보유는 몇 % ? (      )



법률혼, 사실혼,  
일반입양과 친양자



보험의 계약을 활용한 부모의 의지 반영 컨설팅

## 6> 유류분과 보험설계

### 유류분 제도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함

### 유류분 지분율

□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단순위헌, 2020헌가4, 2024.4.26,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6,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유류분 권리자도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 구체적 열거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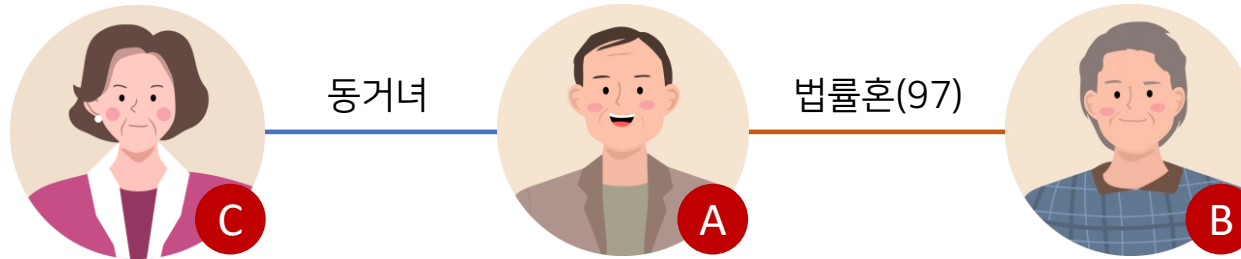
◆ **유류분 청구 가능 자산** : 상속 ( )년內 증여재산 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 ( )년 前에 증여 한 재산도 포함(민법 1114조)

◆ **유류분 청구 가능 기간** : 상속 개시일로 부터 ( )년 이내 & 유류분 침해를 안날로 부터 ( )년 이내

**보험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 자산인가?**

?

## 사례) 유류분 소송과 보험



- ▶ 2011년부터 동거 ▶ 2012년 이혼 소송
- ▶ 2013년 이혼 소송 기각
- ▶ 2013년 이후 보험 수익자 C로 변경
- ▶ 2016년 동업계약서 특약  
(사망 시 C에게 상속인 권리에 우선하여 지분금액 지급 약정)
- ▶ 2017년 A 사망

### 보유재산

- \* 적극적 상속재산 12.1억  
(적극재산 2.3억, 동업지분 9.8억)
- \* 증여재산 21.3억  
(현금 등 수표 지급액 8.5억, 보험금 12.8억)  
(보험 9건, 약 9.5억 보험료 납입)
- \* 상속채무 5.7억

소송

2017년 3월 지분 청산 및 양도소송... 승자는?



## 대법원 판단 2020다247428 유류분반환/ 22년8월 11일

### 나.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등 참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

### 다.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과 유류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과 보험료 납입을 통해 의도한 목적,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얻은 실질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3. 대법원의 판단

####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부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 각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이나, 40대 중반의 의사인 망인이 향후 조만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 또는 일신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증여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 특히 망인이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항소, 상고를 거듭하였는바, 망인이 그 명의의 재산을 남겨두지 않으려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당장 원고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

또한 원심과 같이 피고가 수령한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으로 보려면, 망인이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그 당시에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여 가액으로 가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의 위 각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망인의 나이, 직업, 소득, 사망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13. 8. 9. 이후에는 망인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면서 그 소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했다고 판단하였고(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인정한 위 ①, ②, ③ 부분), 망인이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그 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는지 상관없이 망인이 2013. 8. 9. 이후 납부한 보험료도 증여했다고 판단하였다(위 ② 부분).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1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상고이유 주



# 김홍걸, 동교동 DJ 사저 100억원에 매각... “상속세 때문”

사저 소유자였던 김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매각을 결정했다”며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인 김 이사장과 동교동 사저 소유권 등 김 전 대통령 부부 유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다. 동교동에서 지내오던 고(故)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별세한 뒤, 김 전 의원이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상 상금(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형제간 유산 분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희호 여사는 유언에서 동교동 사저에 대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남긴 바 있다.

김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유언장 효력이 발생하려면 일주일 이내 법원에 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회나 김홍업 이사장 측에서 그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그러다보니 민법에 따라 이 여사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인 김홍걸 의원에 자연스럽게 상속된 것이다. 자신들이 사전에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 뒤늦게 문제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법상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는 규정에 따라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다. 3형제 중 첫째 김홍일 전 의원과 둘째 김홍업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 사이의 자식이다. 김 전 대통령은 차 여사가 1960년 사망한 후 이희호 여사와 결혼해 3남 김홍걸 의원을 낳았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 사망 후 이 여사와 김홍일·홍업 형제 사이의 상속관계는 이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김홍걸 의원에게 이 여사의 유산이 상속됐다는 것이다.

그러다 양측은 지난 2021년 이희호 여사 추도식 2주기를 앞두고 화해하면서 이 여사의 유언대로 사저를 김대중이희호기념관으로 하기로 합의하며 분쟁이 일단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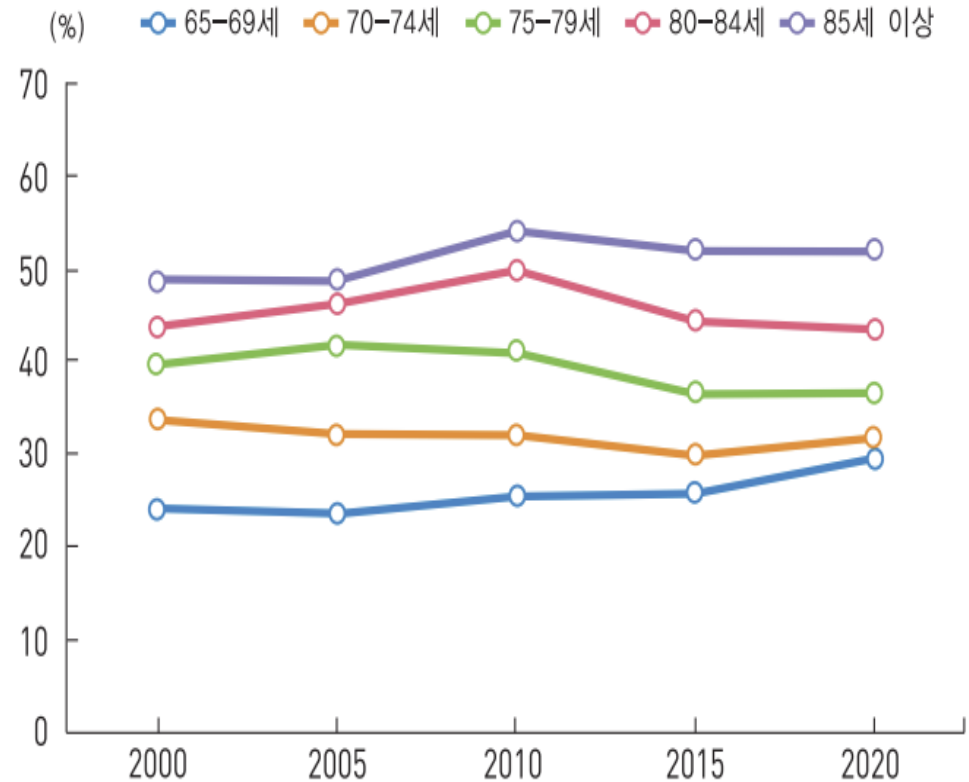


# 7> 상속시 배우자의 노후 안정성과 보험설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지출 예상 (단위: 억원)



[그림 II-15] 노인 독거가구의 연령별 분포, 2000-2020



##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진료비: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

###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

2021년 전체 진료비  
93조 5,011억원 대비

43.4%  
(40.6조원)

### 1인당 월 평균 진료비



자료/ 건강보험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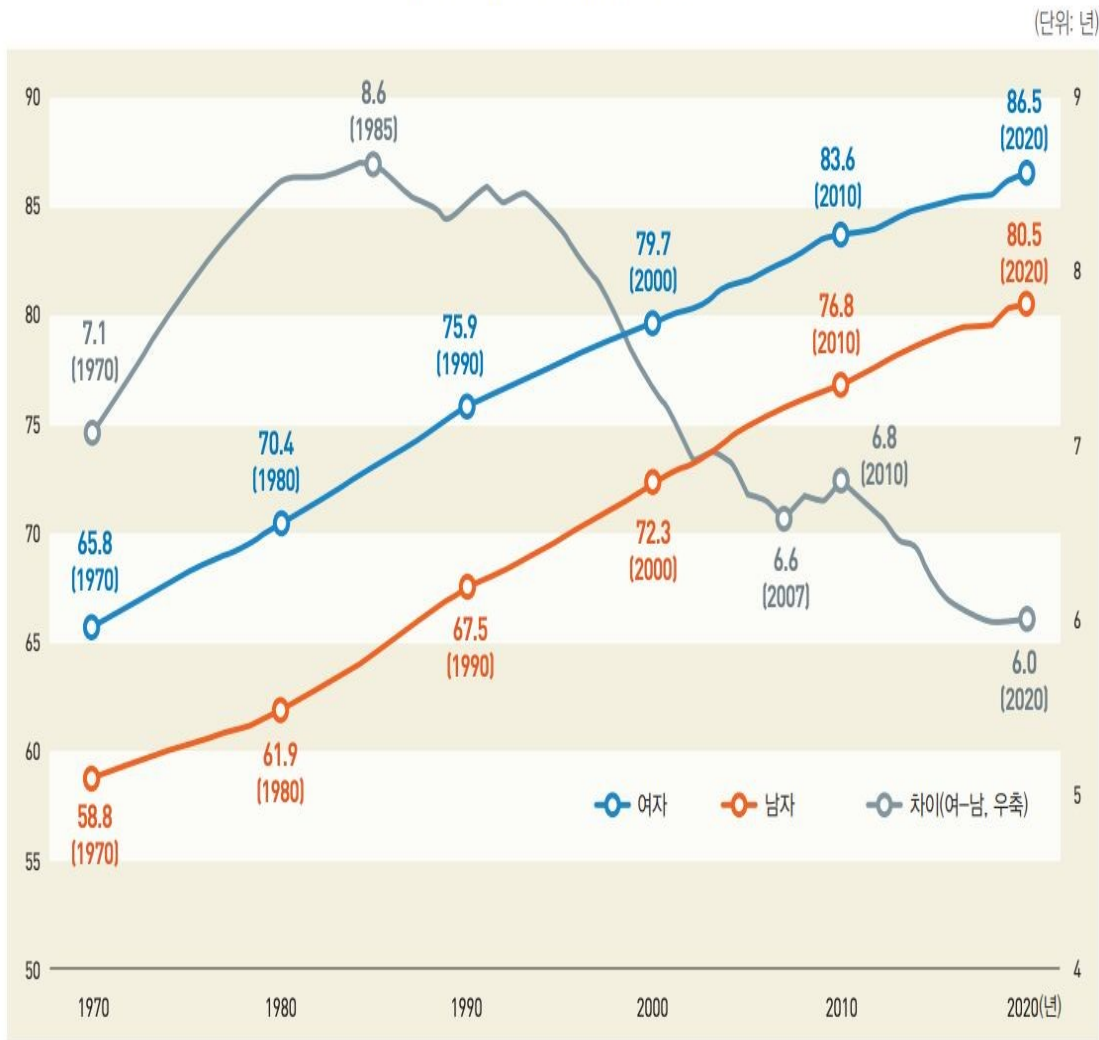
YONHAP NEWS

장예진기자, 장미선인턴 20220330

노인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남녀 차이), 노인 독거 가구의 증가 (주된 성별은?) 노인 성별 주된 자산 보유자는?



[그림 1] 남녀 기대수명 추이



자료: 통계청 생명표(1970~2020년).

